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042)256-8032, 221-8331 전송 252-6976 담당 박상우

발 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 · 충남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02. 12. 6.

문 의 :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박상우 사무국장(221-8331, 016-440-6529)

제 목 :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대전 · 충남 시민운동가 100인 선언(총3쪽)

보도자료

기업인에 이어 대전충남지역 시민운동가 100인, 지방분권 촉구 선언
대전 후보의 지방분권정책 비교,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알리고 후보선택의 잣대로 삼을 터

○ 지난 5일 대전충남 기업인들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에 이어 대전충남지역의 시민운동가 100명도 지방분권 촉구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 이들은 최근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지방분권 공약들을 제시하고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나, 과거 선거에서 보여주었듯이 경쟁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그 실현을 담보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또한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 공약들에 대해 면밀히 비교, 검증하여 대전충남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지방분권을 후보선택의 잣대로 삼을 수 있도록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들 역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제시한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 대국민협약문 8대 과제 반영 및 지방분권 핵심과제 발굴과 실천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이명남 조연상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대전·충남 시민운동가 100인 선언

대전충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민운동가는 지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통감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사회의 균등 발전, 그리고 2할 지방자치의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의 조속한 실현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지방분권은 그동안 만연되어 온 지역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국정 최우선과제이자,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되어야 할 필연적인 정책과제이다.

지난 10년의 지방자치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지방화시대를 꿈꾸며 중앙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환경 등 전 분야 걸쳐 중앙집권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자치행정의 한계와 폐해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 과잉으로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이 마비되어 민생이 외면당하는 일은 빈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권한의 한계와 중앙의 지방에 대한 능력불신으로 인해 지방자치운영 전반에 있어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지방분권대국민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선거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관한 장미빛 공약들을 쏟아내었다가도 그 실현을 담보할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이 지역분산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정부가 답아야 할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인내력은 폭발 일보 직전의 한계상황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더이상 어리석은 정치인들의 생색내기 공약에 의해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시민운동가들 역시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정책을 면밀히 비교, 검증하여 유권자들에게 알려냄으로서 후보선택의 잣대로 삼아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각종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16대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전환기를 맞아 각 대선후보와 정당이 지방분권의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핵심과제 발굴과 실천에 노력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기반구축과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이전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라.

둘째,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방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초적 기능을 완비

하는 제도이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이므로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은 기관위임사무 제도 폐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이양, 그리고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 등 자치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제시하라.

셋째,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넷째, 지방재정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요체이므로 이를 확충하기 위한 세제를 개혁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라!

다섯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라!

여섯째,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일곱째, 지방의 언론, 문화, 정보,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라!

여덟째, 상기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개혁적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하라!

2002년 12월 6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대전·충남 시민운동가 100인 일동

조연상, 이광진, 이현호, 김경희, 임원정규, 김진연, 박정현, 양홍모, 박현주, 이건희, 류진석, 우희창, 한상현, 이인세, 김선건, 최교진, 김제선, 신명식, 윤종삼, 윤종세, 장재완, 박상우, 금홍섭, 유성미, 김현주, 이현주, 민명수, 박재묵, 김조년, 김온순, 고병년, 김선태, 김용분, 류병로, 민병애, 배명순, 백운기, 양혜숙, 최정우, 안중삼, 전미숙, 김광식, 최충식, 서현숙, 길복중, 문창기, 김종남, 이범진, 윤진아, 남지명, 김용덕, 박혜진, 길운환, 전연옥, 최지희, 조현자, 이억수, 송기호, 천용기, 박영송, 김승영, 박병현, 김수현, 박병남, 남상호, 문상원, 오현균, 최재준, 이명원, 한진걸, 이충재, 문 혈, 김정애, 노중호, 이기홍, 박은경, 이숙자, 차수철, 김억수, 김병빈, 이평주, 고성길, 김지훈, 박종범, 성기원, 이윤희, 이희출, 정형영, 정선원, 정 훈, 강순구, 최양순, 황선만, 김양현, 유진수, 김태용, 이정일, 이희경, 조상연, 최영준 (이상 총 100명)